



세월호 참사 1년,  
대형사고와 시민의 안전

### 3강.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이진우



- 콘트롤타워
- 골든타임
- 무능
- 쇼
- 가만히 있으라
-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부차적인 것이 됨

- 비정규직 고용 선호 (29명의 선원 중 15명 계약직)  
(기관부 선원 17명 중 12명 계약직)



구 분		시행주	대상자	교관
선내숙지 훈련		수시	전 선원	선장
해상인명 안 전 훈 련 및 대응훈련	-소화훈련(필수) -인명구조, 퇴선, 방수	매 10일마다	전 선원	선장
해양사고 대응훈련	선체 - 총 - 추 - 악	<div> <p>2014년 세월호 승무원들이 받은 훈련은 <b>소화훈련 1번</b>뿐</p> <p>2013년에 청해진 해운이 지출한 안전교육비는 <b>총 54만원</b></p> </div>		
	인명 동요			
	비상조타훈련	3개월	전 선원	선장
기름유출 대처 훈련		매월	전 선원	오염방지관리인
선박의 안전, 여객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테러 훈련/교육, 해상안전 관계법령		매 3개월	소집교육	안전관리담당자



- 폐쇄된 병동을 청소하고 있는 한 노
- 저 노동자는 직접 고용되어 있을까

## 환자이송 보안(안내)요원 치료보조노동자 급식노동자 청소노동자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병원 내 상시,  
지속업무분야가 거의 외주  
하청업체에 맡겨짐



환자 이송반을 통한 환자 이송



리넨교환 전담인력을 통한 리넨 교환



대한급식전문



- 환자도, 노동자도 위험한 병원 현장의 현실
  - 한국 급성기 병상 당 간호사수 0.32명(OECD 평균 1.1명)
  - 격리병동에서 메르스를 전담하는 간호 인력이 부족해 각 병동에서 임의로 차출해 배치하고 있는 실정 (서울의료원은 일반병동 폐쇄)
  - 감염자를 격리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은 12시간 노동의 극심한 노동 강도로 피로를 호소
- 병원은 그동안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해결해왔는가??
  -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임에도 병원업무를 계속해서 외주화
  -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 부족
  - 의료서비스 질 저하



- 메르스 감염 우려...
- 그 중 하... 비정규직 문제
- 삼성서울
  - 용역... 되어 일상 업무
  - 확진 받은... 가까운 사람과 접촉



모두 파견, 용역회사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메르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



- 인천공항
  - 메르스 확진자의 출입국이 확인
  - 당초 보안, 검색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지급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음
  - 노동조합이 문제제기 하자, 이후 마스크를 지급하기 시작
  - 면세점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는 이용객들의 불안을 이유로 여전히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
- 승객을 직접 대면 서비스하는 공항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비스 대부분을 하청, 용역으로 돌림
  -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됨



우리는 왜 시민과 노동자익권전  
을

구분하기 쉬우나?

- 2008년 6월 화물연대 파업

- △운송료 인상
- △표준요금제 도입
- △유가 보조금 요구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 언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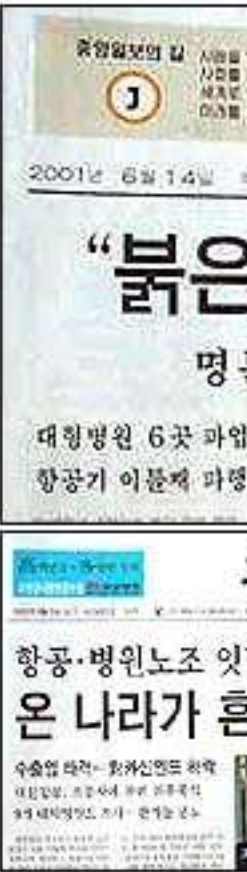
- 물류에 초비상
- 운송에 큰 차질
- 피해 우려
- 수출 비명
- 물류대란
- 전국 곳곳 몸살
- 폐해 속출

경향신문 <국정 난맥 속 여권 '형님' 논란>  
 국민일보 <경제 멍드는데...해법이 없다>  
 동아일보 <화물차 1만여대 스톱...수출 비명>  
 서울신문 <트럭 몰스톱...주요 항만 포화>  
 세계일보 <유럽통합 또 좌초>  
 조선일보 <일본, 대북제재 일부 푼다>  
 중앙일보 <MB정부 개혁과제까지 반대 투쟁>  
 한겨레 <보수단체 KBS·MBC 진입 시도>  
 한국일보 <물류 몰스톱...산업계 마비>

-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파업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 X







사회  
사회일반

## "해도 너무해" 광주시내버스 시민 불모도 파업 예고

기사등록 일시 [2014-06-22 12:57:29]

인쇄하기 이메일 크게 작게



【광주=뉴스시】류형근 기자 = 20일 오후 광주 북구 유동 한국노총전남본부 앞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버스노동조합 조합원 500여명이 '비정규직 해소와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2014.06.20 hgryu77@newsis.com 2014-06-20



- 한국사회는 **시민**과 **노동자**를 **철저히 분리**
- 같은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인식.

- 물건을 사면 시민
- 일터에 들어가면 노동자

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안전에 대한 의무 방기

- 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 〈무고한 시민〉
- 〈노동자〉

**최소한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

- 이런 구분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협
-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크나큰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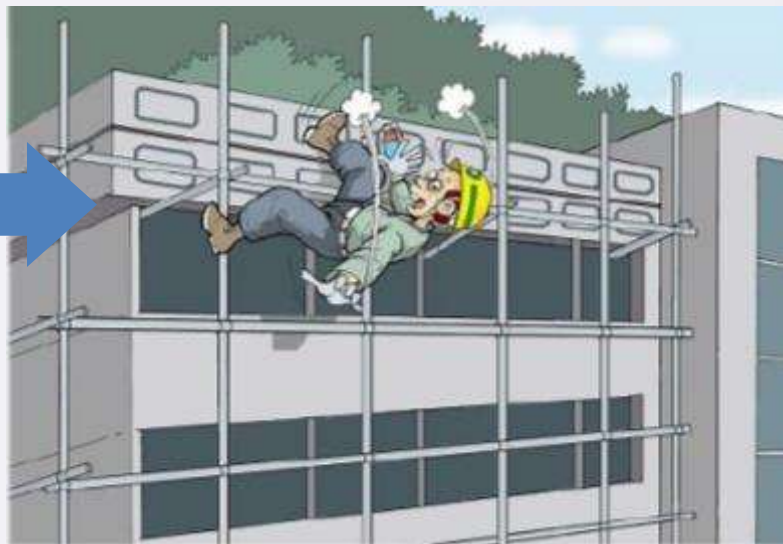


- 자본가들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함.**
  - 이윤은 사적 전유하면서
  - **위험은** 사회화되어,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
-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과거의 셀 수 없는 사고들은 말해주고 있음
  - 노동자 · 시민 모두가 기업의 탐욕에 밀려
  - **안전이 낭떠러지로 추락한 순간 사고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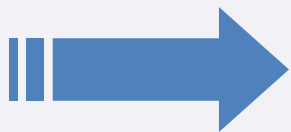
노 동 자 들 의 안 전 실 태

안전? = 물리적 위험이 없는 상태!  
→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 !!!!!





-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
-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 사고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 안전하게 일할 권리란

#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











위험한 현장의 노동자들을



건축현장 형틀목수 건설노동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층작업 비계공 건설노동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 매년 6~700명 건설노동자 사망

영국 건설노동자 산재 사망의 11배  
 건설현장 중대재해 20%가 건설장비 사고  
 장비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상도 적용 제외



 민주노총



22,900볼트 고압선 작업 전기원 노동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여수산단 사일로 폭발 6명 사망, 11명 부상


민주노총 / 일과 건강



# 2011년 제조업 산재사망 노동자 548명

각종 화학물질, 발암물질로  
금속노동자 직업병 심각



 민주노총



주물 작업을 하는 금속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해 증기에 휩싸여 일하는 금속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계가공 작업 금속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9,044개 지회 제품 분석**  
**1, 2, 3급 발암물질 함유 제품 38%**  
 유럽 불보자동차 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 약 1,000개

민주노총 / 일과 건강



에스컬레이터 설치 금속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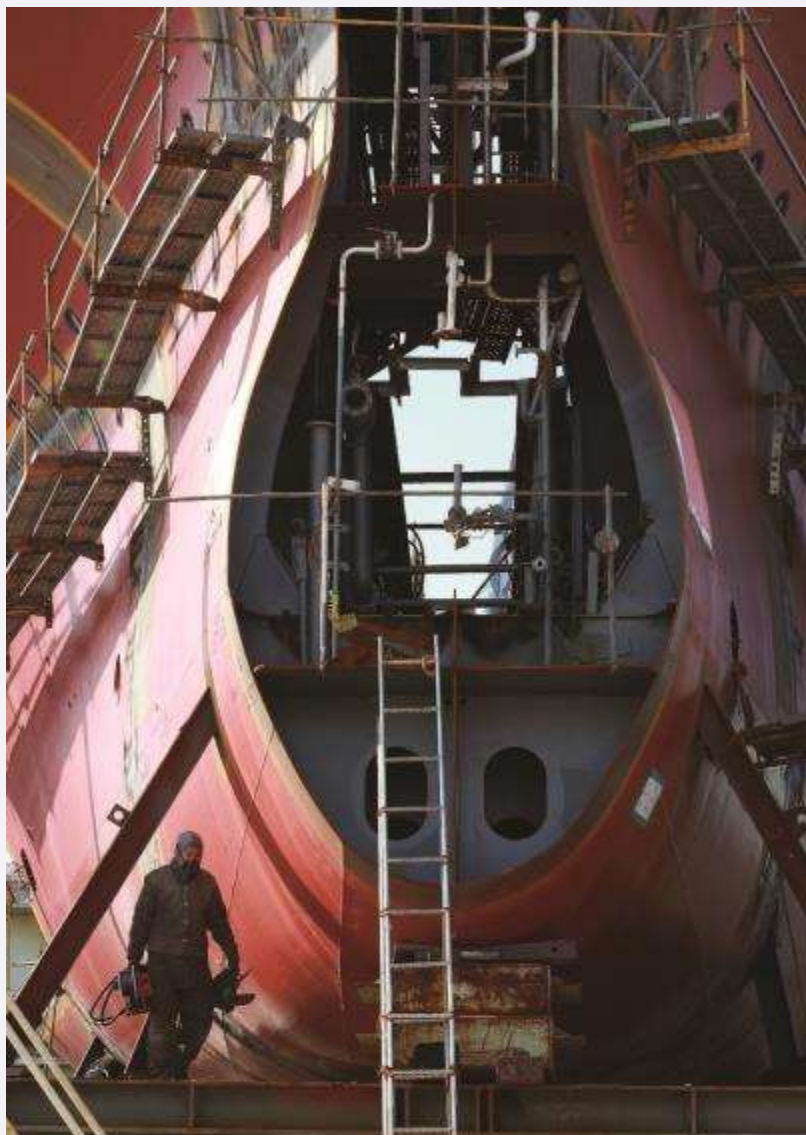




조선소 도장 작업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소 현장 용접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2년동안 용광로 쇳물 뒤집어 쓰고  
사망한 청년 노동자 3명

민주노총 금속노조





## 당진 현대제철 화장 공기단축지시 1년반에 17명 산재사망

사고일시	사상자 수	사고내용
2010~2011년	사망6명	
2012. 09. 05	사망1명	추락사
2012. 10. 09	사망1명	강전 추락사
2012. 10. 25	의식불명1명	추락
2012. 11. 02	사망1명	발판붕괴 익사
2012. 11. 08	사망1명	추락사망
2012. 11. 09	사망1명	기계설치작업중 함착사망
2013. 01. 24	사망1명	천정크레인 함착 사망
2013. 02. 18	사망1명	냉각실 추락사
2013. 03. 14	사망1명	과로사
2013. 05. 10	사망5명	아르곤 질식사
2013. 10. 29	사망1명	추락사망
2013. 11. 26	사망1명 부상 8명	천로가스 누출 사망
2013. 12. 02	사망1명	추락사망
2014. 01. 24	사망1명	추락사망

현대제철 현장 금속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2003년 이후 선로보수작업으로 사망한 노동자 15명





청소차에 매달려 이동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

민주노총



하루 24시간 환자를 씻기고 옮기고, 감염체에 노출되는 간병 노동자

민주노총





속도경쟁으로 곡예운전을 강요받는 배달 노동자

민주노총



작업복도 방진마스크도 없는 청소노동자





감정노동으로 서비스 노동자 정신질환 증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하루 10시간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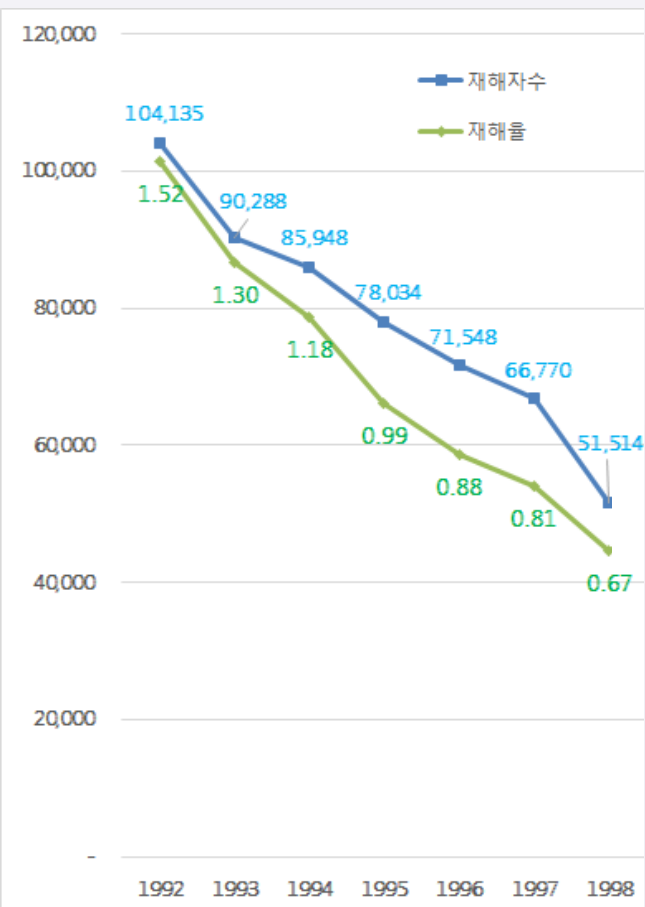
구 분	2014년	2013년	증 감	증감율(%)
○ 사업장수(개소)	2,187,391	1,977,057	210,334	10.64
○ 근로자수(명)	17,062,308	15,449,228	1,613,080	10.44
○ 재해자수(명)			-915	-1.00
- 업무상사고 재해자수			-966	-1.15
- 업무상질병 재해자수			51	0.67
○ 재해율			-0.06	-10.17
○ 사망자수			-79	-4.10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98	-8.99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19	2.26

### 〈2014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4년 하루 평균 5명 사망, 249명 재해

	재해자수 (2014년 기준)	세월호	삼풍백화점	타이타닉	9.11테러
사망 자수	1,850	295	502	1,523	3,023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면  
5명이 산재



산업재해율 추이 - 전체 노동자 가운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비율



# • 노동부 : 사업장 안전관리와 무관한 사망자를 제외

-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및 폭력행위 등에 따른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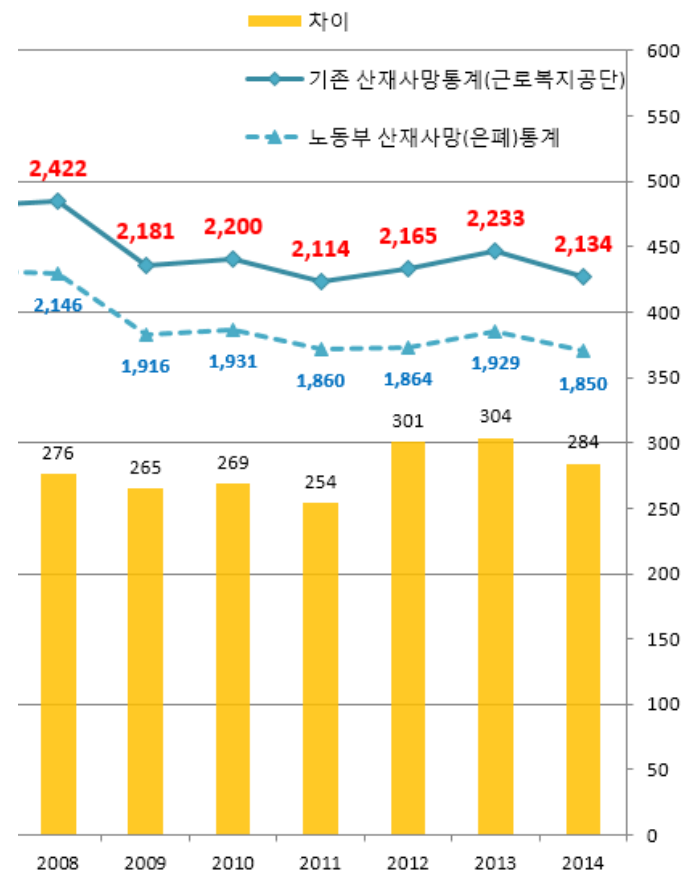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통계에서 제외)

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산재 사고와 별로 관계없는 수치는 삭제

## 주요 OECD 국가의 산재율과 사망만인율

국가	부상재해율 (%)	사망만인율
영국('06)	0.52	0.07
스위스('08)	2.27	0.16
핀란드('07)	2.85	0.17
스웨덴('08)	0.67	0.17
호주('06)	1.07	0.2
노르웨이('08)	0.66	0.2
독일('07)	2.80	0.22
일본('08)	0.23	0.23
스페인('08)	5.06	0.33
프랑스('07)	3.94	0.34
미국('08)	3.26	0.38
오스트리아('07)	3.58	0.39
이탈리아('07)	2.65	0.40
캐나다('07)	1.88	0.6
멕시코('08)	3.57	1.0
한국('08)	0.63	1.07
터키('06)	0.03	2.05



산업재해 사망자수 (1995~2014)

# 사망 재해 OECD 평균 3배 이상

## 노동재해를 5분의 1 수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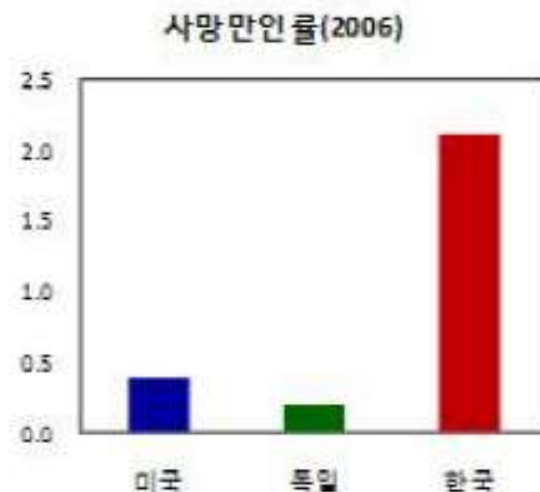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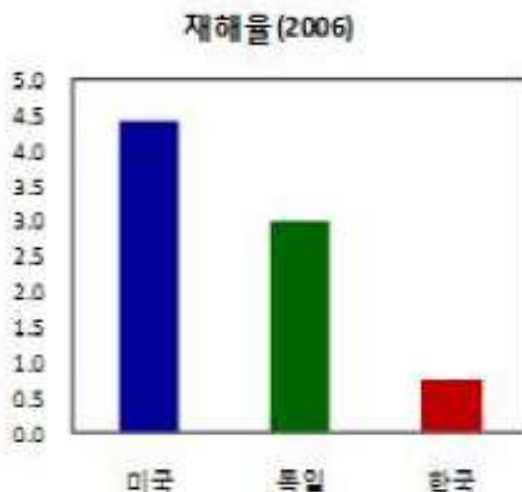
축소·은폐하려는 의도

최고수준 산재사망률을 기록

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산재보  
준에 제외된 환자만 줄일 것이 아니라

포함되지 못한 건강보험 이용자나 공상으로 처리  
노력이 더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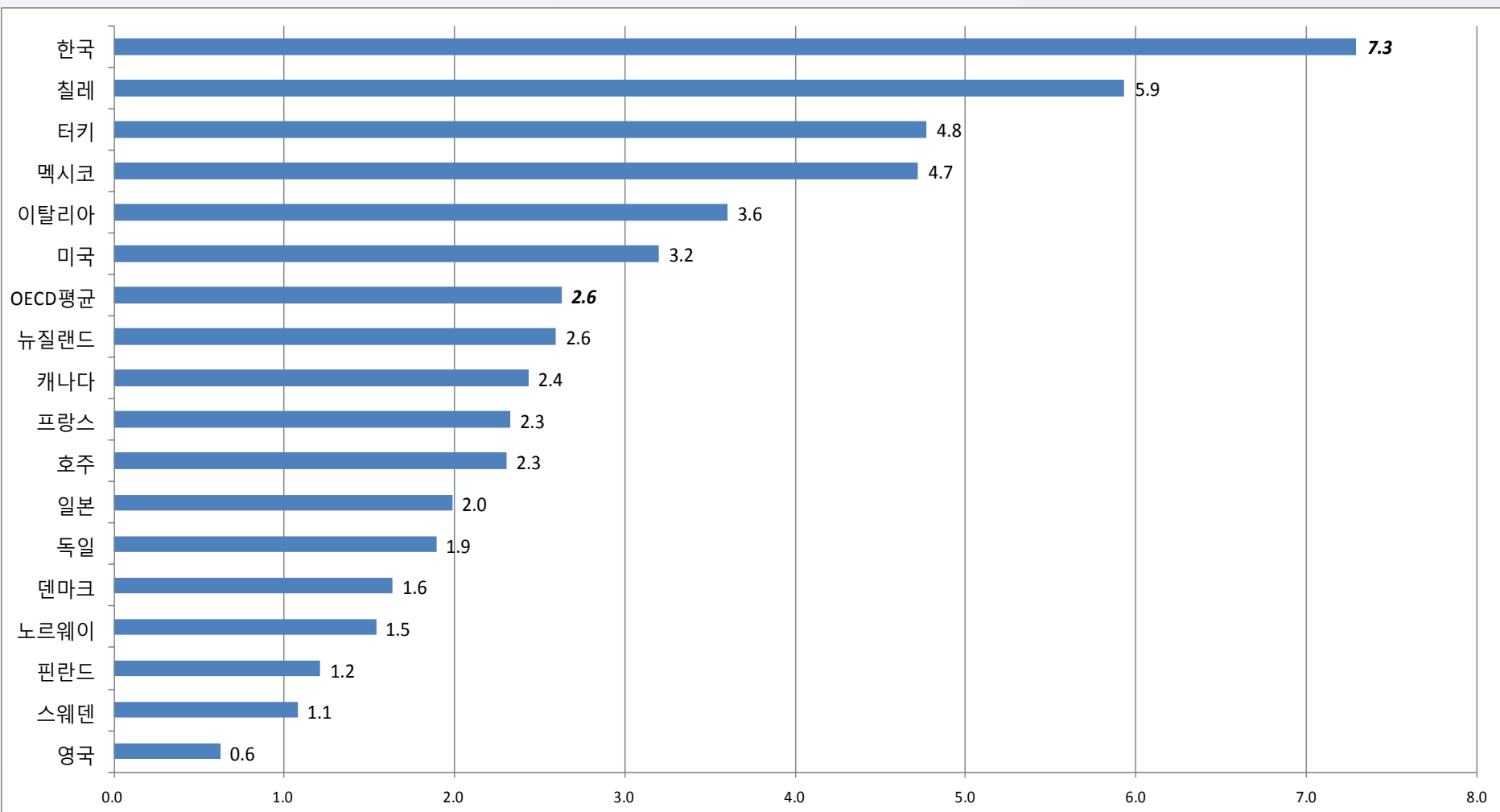
아직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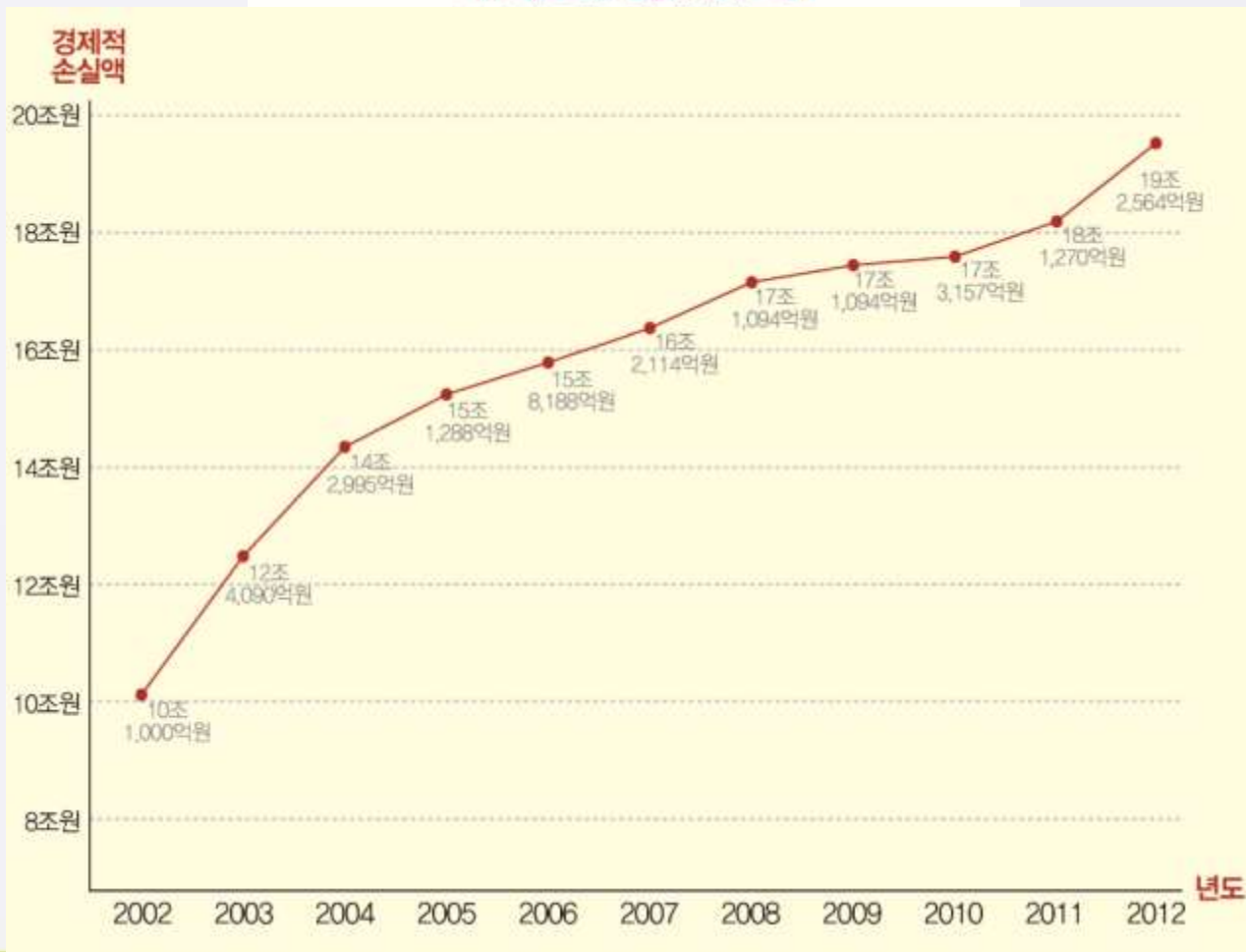
## OECD 주요 국가 산재사고 사망율(십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 2012년 기준)

※ 자료 출처 : ILOSTAT에서 재가공





## 11년간 산재 경제적 손실액 173조 3,947억



2008년 이천 냉동창고

근로자 40명 사망

벌금 2천만 원

2011년 대형마트

근로자 4명 사망

벌금 백만 원

300~500만원

사망사고 벌금

0 안전규정

안전규정 X



# 산재사망 벌금

## 한국 50만원 VS 영국 6억 9천만원

- \* 2008년 건설노동자 40명 산재사망 벌금 2,000만원
- \* 2012년 4명 사망 이마트 벌금 100만원
- \* 한국 90%이상 사업장 산안법 위반시 평균 과태료 95만원
- \* 미국 산안법위반 벌금 1위 사업장 226억 9천만원

원청	사고	사고내용	처벌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4명사망 25명부상	용접 폭발화재사고	처벌없음
한라건설	12명사망8명부상	작업선 침몰 익사	하청업체만 처벌
현대산업개발	3명 사망	추락	현의 없음
대림산업	6명사망 부상11명	가스폭발	원청 사업주 불기소





# 한국 산재사망 처벌

중대재해 2,045건 중 징역형 0.03%, 실형 전무  
무혐의, 각하 등 사업주 처벌 없음이 32%

\* 산재사망 처벌 외국은요?

- 산재사망에 징벌적 배상, 최고 경영자 처벌하는 기업살인법 제정
- 2003년 호주, 캐나다 제정, 2007년 영국 제정
-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반복적 산재사망 20년형 법안 의회 상정





공무원 300명

전국 150만곳

점검 15년

용광로 사망, 막을 수 없었나

- "기업살인" 개념 도입 중심으로

국회의원 임준 (전장연대 2012. 9. 19(수) 오전 10시)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일하다가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산재 선진국, 영국의 해법은?

이슈+뉴스  
'산재 왕국' 언제까지?

지난해 2월 기업살인법 첫 적용  
산재 사망 사건에 벌금 7억 원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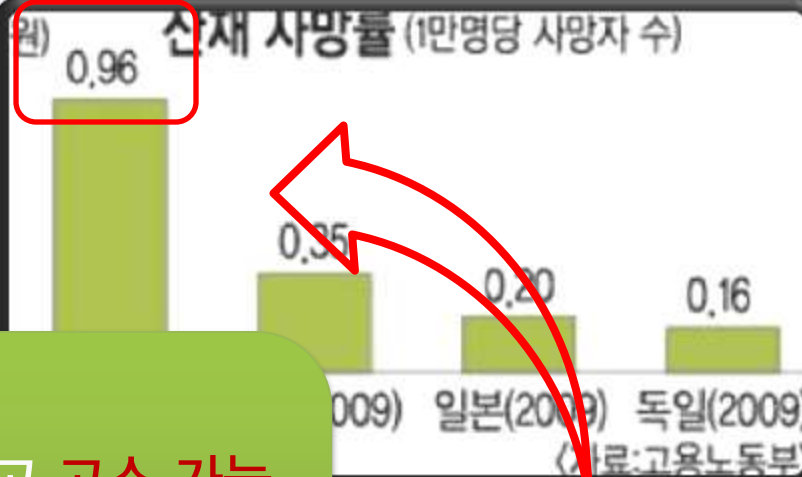
이슈 & 뉴스

'산재 왕국' 언제까지...



캐머런 스미스

회사의 책임자  
무시했기 때문  
기소됐습니다.



영국

산업관리자가 형사권 가지고 **고소 가능**  
안전수칙을 어기면 **범죄**

한국

그냥 벌금만 내게하는 **숨방망이 처벌**

24배



자료: 영국 안전보건청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학능  
검열지 앞는 대형 재난사고



- 노후산업단지의 연속적 화재, 폭발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 철도, 지하철, 버스, 항공 등 공공교통사고
- 화물자동차 사고로 매년 1,300여명 사망
- 각종 시설물 붕괴, 화재 사고 연속 발생
- 병원, 요양원,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사고

사건	규모	문제점
지하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2014년 5월2일)	388명 부상	- 신호체계 오류, 외주화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2014년 5월 26일)	8명 사망 58명 부상	- C내부 공사 중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 작동 긴급 전원 시설도 차단한 채 공사.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에 공사. 공사감리도 비상주 1인만 지정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8명 중경상	- 새벽에 화재 발생 5분 사망 - 70~80대 환자 34명에 간호조무사 1명 - 소방대원 도착시간 6분 동안 화재로 유독가스로 사망 - 스프링 쿨러 없음. 신경안정제 과다. 손발 결박 흔적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 (2014년 10월 17일)	16명 사망 11명 중경상	- 환풍구 안전 관리 규정 없음 - 하중을 이기지 못하도록 설계했으나, 공연 중 안전요원이나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표지판 없음 - 규제완화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완화
오룡호 침몰 (2014년 12월1일)	27명 사망 26명 실종	- 오물배출구 파손 상태에서 자격미달 선원 고용 출항 기상악화에도 쿼터량 채우기 위해 조업 강행.
영종대교 추돌 (2015년 2월11일)	2명 사망 63명 부상	- 105중 추돌사고 - 안개특보제도. 안개관측장비 없음
사당 체육관 붕괴 (2015년 2월 11일)	11명 중경상	- 거푸집 공사 안전관리 규정 미 준수
용인 붕괴사고 (2015년 2월25일)	1명 사망 8명 부상	- 거푸집 공사 안전관리 규정 미 준수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5년 2월 26일)	5명 사망 139명 부상	- 규제완화로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 건물간 거리, 스프링 쿨러 설치 기준 적용제외 등

사업장 안전 능력 향상 시민의 협력



## 최근 4년간 유독가스 누출 · 폭발 주요 사고 일지

2010년

- 2월4일 경남 마산 환경시설사업소 질식사고(메탄가스) → 2명 사망, 1명 부상
- 9일 충남 당진 산업단지 질식사고 → 1명 사망, 26명 부상
- 12월20일 울산 남구 중질유분해공장 폭발사고 → 1명 사망, 6명 부상

2011년

- 2월8일 울산 남구 산업단지 폭발사고 → 1명 사망, 2명 부상
- 7월2일 경기 고양 이마트 질식사고 → 4명 사망

2012년

- 1월22일 경남 함안 선박업체 폭발사고 → 2명 사망, 4명 부상
- 2월3일 강원 태백 광업소 폭발사고(메탄가스) → 2명 사망, 6명 부상
- 4월5일 경북 영주 질소생산공장 폭발사고(질소가스) → 1명 사망, 4명 부상
- 9월27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 폭발사고(불산) → 5명 사망, 8명 부상
- 10월31일 전남 영암 산업단지 폭발사고 → 2명 사망, 9명 부상

2013년

- 1월12일 경북 상주 산업단지 누출사고(염산) → 주민 700여명 대피
- 28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누출사고(불산) → 1명 사망, 4명 부상

- 구미 불산 누출 사고

- 2012년 9월 구미 (주) 휴 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 노동자 5명 사망, 18명 부상
- 1만3,000명 건강진단.
- 주민 300여명 대피.
- 재난지역 선포, 피해보상 예산 554억
- 노후 산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붕괴 시민 직접 위협





#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인포그래픽 10.17 ver

9월 27일

- 15:43 불산 12t 유출
- 16:20 구미시, 상황발생 접수
- 17:00 환경부, 사고상황접수
- 17:08 구미시, 4단지 대피요망 통보
- 17:40 환경과학원, 사고대응정보 제공
- 17:50 봉산리, 임천리 주민대피
- 18:45 환경부, 사고 경계경보발령
- 19:09 구미시, 근로자 대피통지
- 20:00 현재상황실 및 비상대책회의
- 20:20 구미시, 인접업체 대피명령
- 대구환경청, 1.3km 내 주민대피명령
- 20:40 1차 재독작업 및 물청소
- 21:30 환경부, 사고 심각단계 상황조정
- 22:43 구미시, 295개 업체에 접근금지통보
- 23:40 사고 탱크로리 불산 밸브 차단

9월 28일

- 00:00 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 도착
- 00:50 환경과학원, 불화수소가스 존재 확인
- 02:27 환경부, 심각단계 해제 결정
- 03:32 구미시, 상황해제
- 11:00 구미시, 대피주민귀가 권유
- 16:30 사고현장 수습 완료

10월 6일

- 봉산리, 임천리 주민 340명 재대피

10월 8일

- 구미 불산유출 사고지역, 화학재난지역 선포

X인명, 재산피해 신고지역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불산분석결과

Red 식물내 불산 함유농도 (mg/kg)  
Orange 공기중 불산농도 추정치 (ppm)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농도는 0.02

포도입  
1002 0.5

배2  
9594 15. 1575 1.7

배1  
7727 12. 3407 3.9

배3  
2823 3.0

배4  
782 1.2

0.5 KM

1 KM

2 KM

사망자: 5명  
치료 및 검진환자: 8,000명  
피해업체: 126개사 10월 11일 기준

불산노출영향



피부를 통해 빠른 게 이동해 심부 피부조직에 손상을 야기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흰색으로 변하고 물집이 잡힘  
노출부위가 160cm 이상이면 전신 독성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심한 화상, 각막의 광투명화, 각결막염, 실명  
기침, 질식,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오한, 열, 창백증, 독성반응

구미 불산유출사고리포트  
<http://report.safedu.org>





##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 불산가스 누출 지역 피해현황



- 초기 대응 실패 : 능력 대응과 안일한 판단

- 안전보건 등
  - 폭발사고
  - 위험하고
  - 도급금지
  - 원청의 무

긴급차단장치 / 연료밸브  
2중 장치 미설치 문제

응급조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업주 관리책임

-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
  - 근로자의 실수 / 연료 밸브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불산가스
  - 안전수칙 불이행 / 작업 순서 매뉴얼 불이행 / 안전보호 미착용



- 주민과의 소통 부재
  - 환경부 “안전하다”
  - 주민들 “못 믿겠다”
  - 민간합동조사단 불참

## 〈세월호〉, 화학물질 사고의 연장

복잡한 소관 부처와 관리 체계  
컨트롤타워 부재

초기 대응 실패와 안일한 판단  
실행매뉴얼 및 대응체계 부재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  
주민(피해자)과의 소통 부재

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이 시민에게

#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인근  
식물불소농도로 추정한 대기 중 불소농도(2013.2.7)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장예진 기자 / 20130128  
@yonhap\_graphics(트위터)

YONHAP NEWS

삼성전자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약고

삼성전자 화성공장 인근 현황

### 삼성전자의 비협조 - 사실상의 조사거부

- ✓ 사고현장 접근 및 주변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시료 공동채취 및  
분석 제안 거부
- ✓ 현장 CCTV 공개 거부
- ✓ 공정안전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 제출 거부
- ✓ 협력업체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기초적 자료조차 제출 거부
- ✓ 민관합동조사단의 참고인 출석 요청 거부 등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지만

불성실한 주민설명회





© 연합뉴스

2007

##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2007년 12월, 삼성중공업 소속의 크레인 부선 '삼성 1호'가 태안 앞바다에 정박해있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했다. 삼성중공업은 기상악화에도 무리하게 출항시켰고, 대산해양청 관제실의 경고도 무시했다. 이 해상충돌로 1만9백톤의 기름이 태안 앞바다로 흘러들어갔다.



국토교통부

2007

##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태안 일대가 온통 기름으로 뒤덮였다. 바다 속 생물 개체수가 사고 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생계가 곤란해진 지역주민들의 자살도 잇따랐다. 20~30년 후에야 태안의 생태계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 SAMSUNG

## 삼성전자

-발암물질 사용, 직업병 은폐-

### 사망 110명 제보 217명

**사건개요**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 직업병 제보자 217명 중 80명 사망(2015.2.)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임이 밝혀지고 있으나, 책임 회피  
특별감독결과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징** 젊고 건강한 노동자들이 백혈병이나 암에 걸려 죽어나가는 기업  
불산 누출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으나 10시간 동안 사고 은폐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 거부

**선정이유**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양산, 산재책임 회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거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





- 삼성전자 임 · 직원 3명
  - 벌금 300만~700만원
  - 유독물관리자 전모씨 등
- 삼성전자 협력업체 STI서비스 임 · 직원 3명
  - 벌금 400만~700만원
- STI서비스
  - 벌금 1천만원
-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 삼성전자 : 무죄
  -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센터장
  - STI서비스가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직접적 책임 없다

기업이윤 위해  
안전의무방기

노동자  
안전과 건강  
위협

시민  
안전과 건강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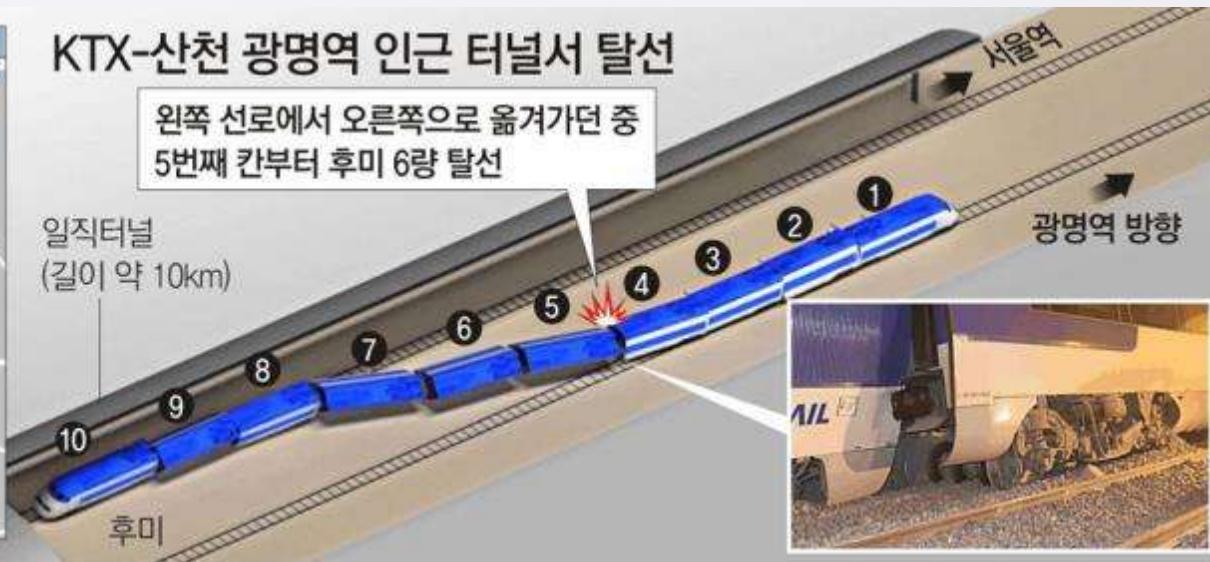
- 추진배경
  - 부채 감축을 위한 경영효율화
  -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이행
    - 핵심업무는 공사 직원
    - 단순 반복작업은 민간이 수행
- 기본 방향
  - 비핵심 유지보수업무 외주화 확대시행(선로, 건축)
  - 신규 건설사업 개통에 따른 소요인력 자체 충당
- 철도공사 직원
  - 유지보수 계획 수립 데이터의 분석관리
  - 시설물점검, 검측과 불량여부 과정, 업무 위탁관리
- 외주업체 직원
  - 단순보수작업, 재료보수 및 교환, 환경정비 등 비핵심업무
  - 건축분야 위생설비 및 소방시설관리 업무 외주화

# 철도 - 2011년 광명역 KTX열차 탈선사고



## KTX-산천 광명역 인근 터널서 탈선

왼쪽 선로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던 중  
5번째 칸부터 후미 6량 탈선



## 코레일이 밝힌 광명역 KTX 탈선 사고 과정

1

11일 오전 1시10분~  
오전 4시 30분

- 외부 민간업체, 선로전환기 컨트롤 박스 보수작업 실시
- 노후 케이블 및 너트 등 교체

2

오전 6시~7시22분

- 열차 통과시,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 3회 발생
- 서울 구로동 관제센터에 경고 신호 작동

3

오전 7시32분

- 코레일 직원, 현장 점검 및 재보수
- 선로전환기 직진으로 전환
- \*관제센터에는 '임시 조치했다'고만 보고, 직진 전환 사실은 보고하지 않음

4

오후 12시53분

- 관제센터, 진입열차가 우측 선로(하선)로 바꾸도록 스위치 작동

5

오후 1시1분

- 또다시 선로전환기 불일치 발생 하자 다시 직진(상선)으로 전환
- \*이 과정에서 우측선로(하선)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중간부(크로싱)는 상선으로 전환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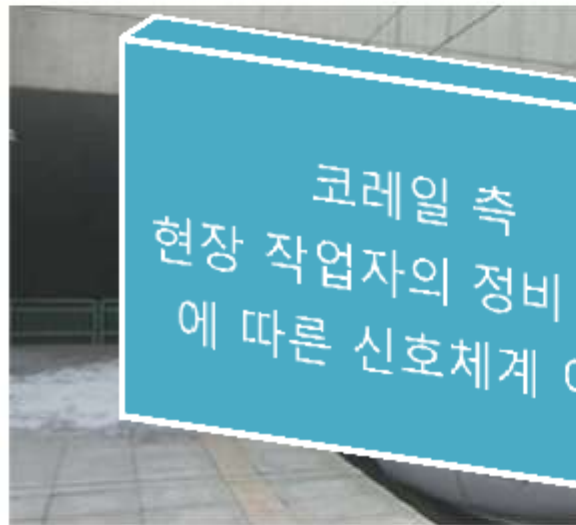
오후 1시5분

- 부산~광명행 KTX 산천 224 열차 탈선
- \*차량 앞쪽 4량은 하선 진입했으나 나머지 6량은 크로싱 부분에서 이탈

## KTX 광명역 탈선사고...또 불거진 '안전불감증'

입력 : 2011.02.14 10:11 | 수정 : 2011.02.14 10:24

공유하기



지난 11일 고속철도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 탈선사고는 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전환기'의 이상신호를 사고 조치하지 못했을 뿐더러 무리한 열차운행을 중지시키지

## KTX탈선 원인은 대대적 인력감축도 한몫

'자정비 과실' 추정에 철도노조 "안전 뒷전 상업화가 초래"

2011-02-14 17:54:34 | 노출 : 2011.02.14 17:54:42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코레일은 이런 자체 조사 결과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 조사위가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사고 원인과 관련해 "철도공사가 지난 수년간 경영실적 개선, 인력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진행해 온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외주화 등 돈벌이 위주의 상업화 정책이 그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 2009년 4월, **인력 5,115명을 일괄감축**
  - 보수업무 등을 하는 시설(989명)과 전기(766명)분야 인원이 1,755명
  - 차량 담당 인원은 1,203명
  - 나머지 감축자 2,157명은 운전 및 역무, 열차승무 업무 종사자

• 20

시설유지보수업무 위탁  
**관리체계의 혼선**  
**민간업체의 이윤 중심의 보수업무 시행**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

철도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생명으로 함  
**이윤을 위해 이를 분리할 경우**  
 체계의 **혼선**에 따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짐

으로

되자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한국철도공사)

-안전외면, 외주화-

사망 47명 (2005~2014년 통계)

**사건개요**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청 폐지 후 2005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이후 탈선 39건, 충돌 5건, KTX산천 차량고장 113건 발생 최근 4년간 열차고장 885건, 사상사고 347건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

**특 징** 2011년 검암역에서 야간에 열차감시원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

**선정이유**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후 민영화 지속 추진 안전관련 업무 외주화로 노동자 시민안전 위협 1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

코레일의 열차 등급

고속열차

특급열차

급행열차

보통열차

폐지 등급

**KTX-1**

열차 길이 : 380m (18+2)

좌석 : 929개

제한없는 입석 발매 : 1천명의 승객이 탑승





- KTX-1
  - 총 4명이 탑승. 18량, 929개 좌석
  - 철도공사 직접고용 열차 팀장 1명
  -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된 간접 고용 승무원
    - 안내승무원 2명 / 판매승무원 1명
- KTX-산천
  - 총 3명 탑승. 8량, 363개 좌석
  - 철도공사 직접고용 열차 팀장 1명
  - 코레일관광개발
    - 안내 승무원 1명 / 판매 승무원 1명
- 안전 업무는 열차 팀장 1명만의 역할
- 열차승무원과 팀장이 다른 회사에 채용
  - 업무 지시나 협력이 이뤄지지 않음

10XX51	Pc(동력차)
10XX01	MT1(동력객차-옛 영화객실, 56석)
10XX02	T2(특실, 25석)
10XX03	T3(특실, 35석)
10XX04	T4(특실, 32석)
10XX05	T5(특실, 35석)
10XX06	T6(일반실, 56석)
10XX07	T7(일반실, 60석)
10XX08	T8(일반실, 56석)
10XX09	T9(일반실, 60석)
10XX10	T10(일반실, 60석)
10XX11	T11(일반실, 56석)
10XX12	T12(일반실, 60석)
10XX13	T13(일반실, 56석)
10XX14	T14(일반실, 60석)
10XX15	T15(일반실, 56석)
10XX16	T16(일반실, 60석)
10XX17	T17(자유석, 56석)
10XX18	MT18(동력객차, 자유석, 56석)
10XX52	Pc(동력차)

- 코레일관광개발 비상 상황 메뉴얼
  - 소속 승무원들에게 가능한 직접적으로 안전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
  - 안전 업무는 코레일 소속 열차 팀장의 업무
  -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의 승무원은 안내 방송만을 하도록 규정
- KTX 승무원을 외주화하기 위한 꿈수
  - 승무원의 업무는 안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핵심 업무
  - 외주 위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철도공사의 주장
  - 열차 팀장의 지휘 아래 안전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불법 파견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임.

코레일NEWS-TV

보도자료

코레일 SNS

광고·캠페인

공지사항

코레일앱 소개



Let's  
Korail



철도물류  
정보서비스



자산개발  
사업공모

- ▶ 고객센터협장
- ▶ 부패신고상담
- ▶ 코레일 옴부즈만
- ▶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 ▶ 개인정보처리방침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저작권정책

코레일관련 사이트

GO

### 공사 비정규직 요구는 자기모순, 공사 특채 요구는 노사협약에 배치

□ KTX승무원들은 공사의 1년짜리 비정규직이라도 좋라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데, 노조나 노동계에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비정규직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공사 정규직화 주장은 승무원 전원을 한꺼번에 특채를 하라는 요구로서, 이는 공사직원을 공채를 통해 뽑기로 한 노사협약에도 정면 배치된다.

### KTX승무원 위탁관리는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에 대해

□ 이는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및 지시·감독체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KTX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으로부터가 아닌 소속사인 (주)한국철도유통 상주 직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 이미 지난 2005년 9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주)한국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는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충분하므로 적법한 도급이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KTX승무원이 탑승

□ KTX승무원의 업무는 열차 안전과 거의 무관하다. KTX 열차내 안전담당은 열차팀장이며, 기장·차량관리장·공안요원이 탑승 안전업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5일 이후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음)

□ 외국 일부 국가는 승무원 없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KTX에는 긴급상황시에 대비해 승무원 호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목록으로

담당자 : 전인주 부서 : 홍보문화실>언론홍보처 전화번호 : 042-615-3156

해당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달기

평가하기



- 1심과 2심
  - "KTX 여승무원 실제 사용자는 코레일"
  - 코레일이 실제 사용자고 철도유통은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고 평가
  - 항소심 "흥익회는 불법파견사업주... 코레일 노무대행기관 불과"
- 대법원
  - "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노동자 아니다"
  - 여승무원과 철도공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본 2심 판결이 잘못



대법,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지는 기자 = 김승화 KTX 승무처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해고가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열차팀장의 업무와 여승무원의 업무가 동일한 공간 내에서 수행되고 서로 협조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각 업무의 내용이나 영역은 구분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승무원도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 등 활동에 참여하게 돼 있지만,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조치에 불과하고 여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 최근 빈발하는 철도지하철 사고 문제점
  - 비용절감,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민영화
  -
-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 위험요소
  - 각종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2003

## 대구지하철 화재

192명 사망, 148명 부상

2003년 2월, 대구 중앙로역에  
정차해있던 한 열차에서 시작된  
불이 역으로 들어오던 뒷 차량에  
 옮겨 붙었다. 역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다쳤다.

사고의 모든 법적 책임은 기관사 1  
인이 뒤집어썼지만, 1인승무제를  
도입한 대구지하철공사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구지하철공사는 도리어  
1인 승무를 늘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까지 감축하기에  
이른다.







- 2003년 2월 18일 발생
- 192명 사망, 148명 부상
- 사고 원인
  - 뇌병변 장애판정을 받은 후 이를 비관하던 김모(57세)씨는 전동차에 휘발유를 가지고 탑승하여 라이터로 방화함(1079호)
  - 전동차 문이 열린 상태라 1079호 열차의 승객 대부분은 탈출
  - **지하철 사령실이 화재의 심각성을 파악 못하고** 반대방향 열차(1080호)에게 “조심해 운전해 들어가라” 는 지시만 함.
  - 1분 뒤 1080호 열차에도 불이 옮겨 붙었고, 화재로 인한 단전으로 열차는 출발하지 못함. 화염과 연기가 열차 안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닫음.
  - 승객들에게는 “기다리라 “는 지시만...
  - 역 도착 7분 후 기관사는 **사령실의 지시로 운전실의 마스터 키를 빼고 탈출**
  - 이 때문에 전동차 문이 열리지 않아 1080호 열차 승객 다수가 사망

- 사고 처리

- 방화자 무기징역

- 처벌은 대부분 기관사 및 관제사에 몰림

-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

- 1080호 기관사는 금고 5년

- 1079호 기관사와 관제사는 초동 조치 미숙으로 각각 금고 4년

- 대구시장,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 사고 책임이 아니라 증거인멸혐의 (사고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점)로 기소

- 시설부장은 1심에서 무죄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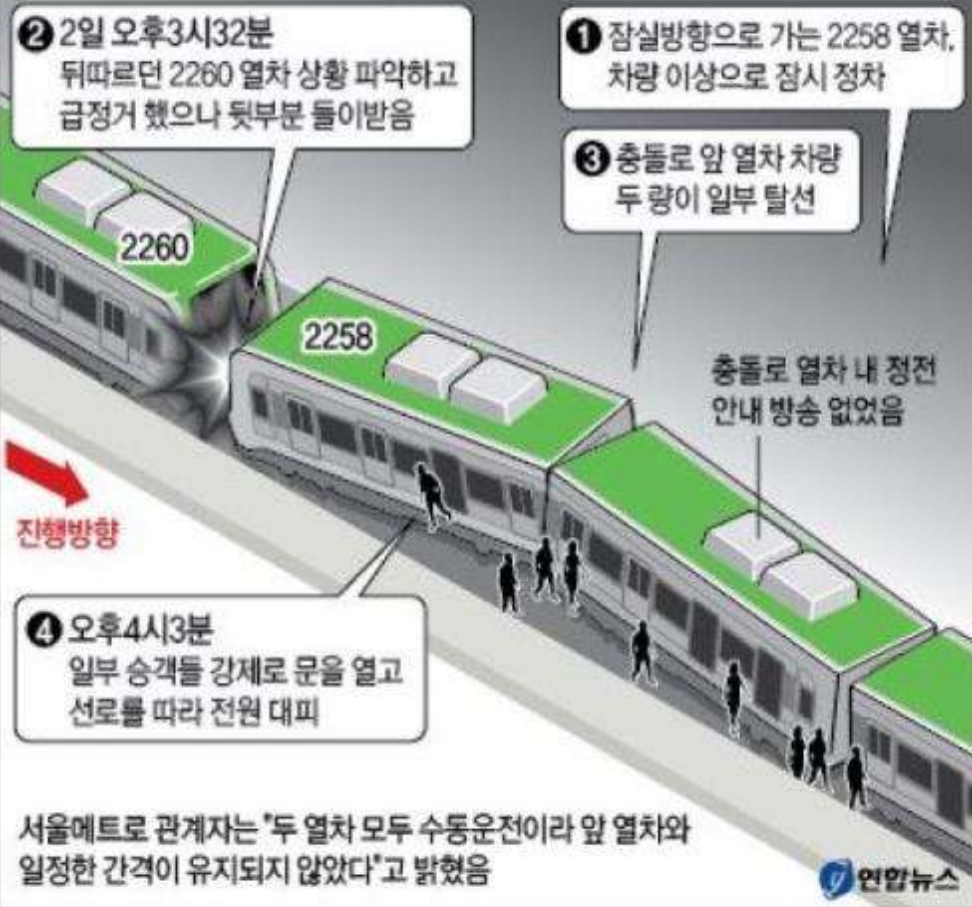
- 윤진태 전 사장은 1심 3년 → 2심 1년6월 → 대법원 및 대구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 책임자 처벌은 없음

- 1인 승무 초동 대응 어려워 대형 참사발생.

- 1인 승무가 참사의 주요한 원인임에도, 2인 승무로 전환하지 않음

## 상왕십리역 열차 충돌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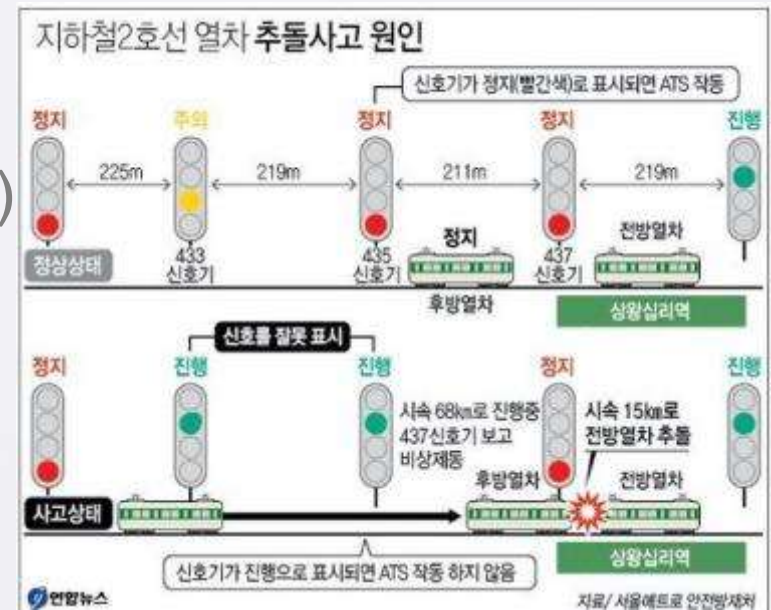
장예진 기자 / 20140502  
@yonhap\_graphics(트위터)

연합뉴스

- 2014년 5월 2일 발생
- 238명 부상(승객 237명, 기관사 1명)
  - 앞뒤 차 안에는 총 1천여 명이 탑승

## • 사고 원인

- 승강장 진입 전에 설치된 신호기 2개가 고장나 신호를 잘못 표시.
- 이에 따라 ATS(후속 열차의 자동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음
- 기관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제동거리 부족으로 추돌.
- 관제사 2명은 두 전동차가 가까이 운행하는 사실을 알고도 간격 조정을 하지 않음.





- 서울메트로 측
    - 초기에 사고의 원인을 ATS 신호의 오류인 것으로 보고
    - 이를 운영하는 민간 외주용역업체에 사고의 책임
  - 원인은 다른 부분
    - 2호선은 신호체계가 ATS(자동정지)와 ATO(자동운전)로 이원화.
    - ATO는 1인 승무
    - 2호선은
    - 1인 승무
    - 중요한 사
-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관리업무를 외주화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
- 서울메트로의 외주화가 원인
    - 2008년부터 외부 민간업체에 전동차 경정비, 스크린도어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하여 정규직 1천명이 감소.
    - 전동차 정비 인원은 2008~2009년에만 200명 넘게 감축.
    - 외주업체는 전문성보다는 서울메트로가 책임을 회피할 구실에 불과.



-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 차량 내구연한 폐지로 인한 **차량 노후화** 문제
    - 21년 이상 된 차량 30% 이상 / 당초에 열차의 내구연한은 15년
    -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철도법, **내구연한 자체를 삭제**
    - 정비주기는 늘리고, 인력은 감축 및 외주화
  - **인력부족, 1인 승무, 외주용역 및 비정규직 확대**
    - 서울지하철 9호선 5無정책
      - 無역장, 無 역무실, 無매표소, 無현업사무소, 無숙직
    - 경전철은 거의 무인시스템
- 이런 지하철의 안전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

## • 화물차 과적

- 세월호 화물 적재량이 알려진 양을 훨씬 초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

“4.5톤 트럭을 출고해서 실제로는 7.5톤(으로 늘려요.) 축을 달고 개조를 해서...승선할 때는 해운사 측에서 4.5톤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톤수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 세월호 이용 화물차 기사, 4월 19일 YTN 보도

제주지역 화물업계 관계자 A씨는 “과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4.5t 화물차량이 20t을 싣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4.5 트럭은 차량 무게의 10%를 초과한 최대 5t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4.5t 트럭이 차량 무게보다 배 이상 나가는 20t의 화물을 싣기 위해선 ‘불법 개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과적차는 전체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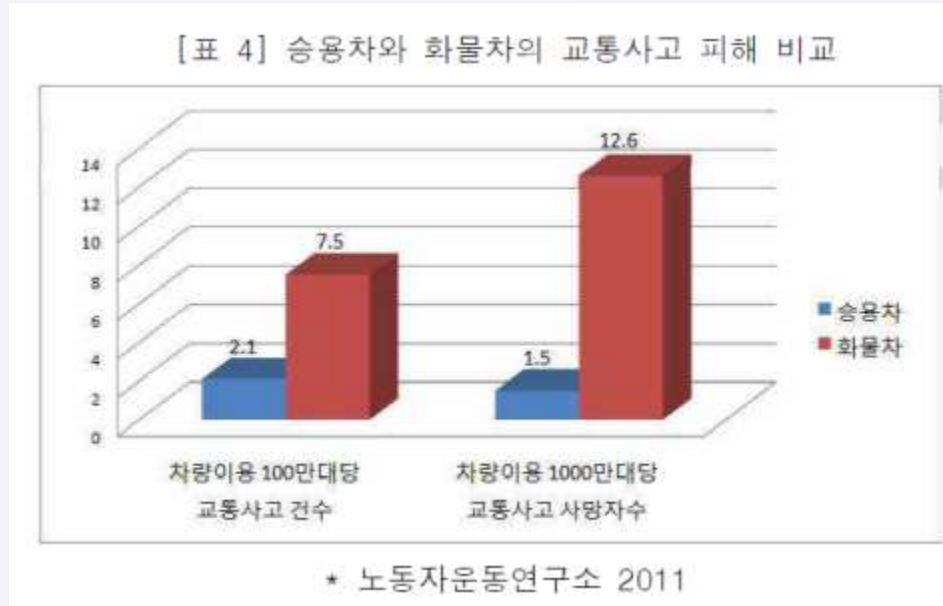
화물차량 통과대수	고발기준 초과대수	비율(%)
328,719	36,159	11.0

\* 선산-김천 구간 고속축중기 시험운영, 2011. 9~10월, 도로교통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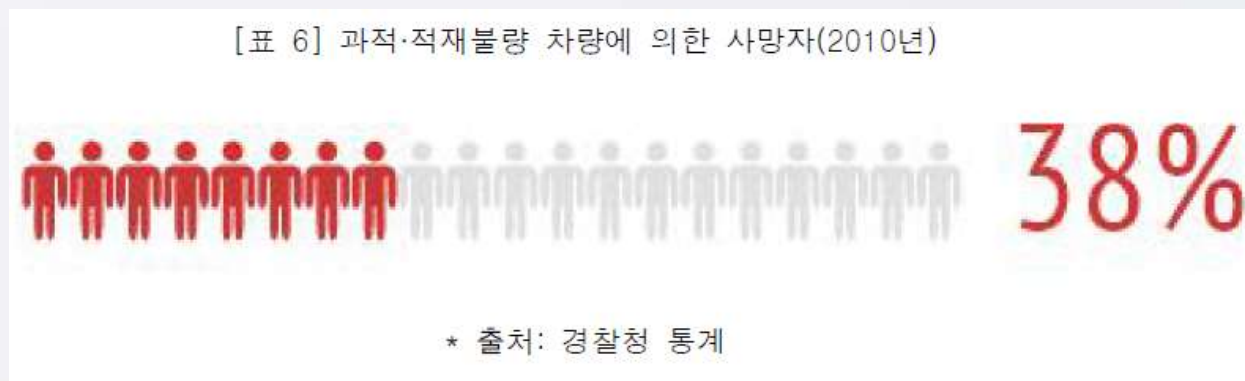
- 전체 화물차 중 75%가 과적 경험
- 기준의 2배가 넘는 화물까지 적재



- 화물차 사고 사망 일평균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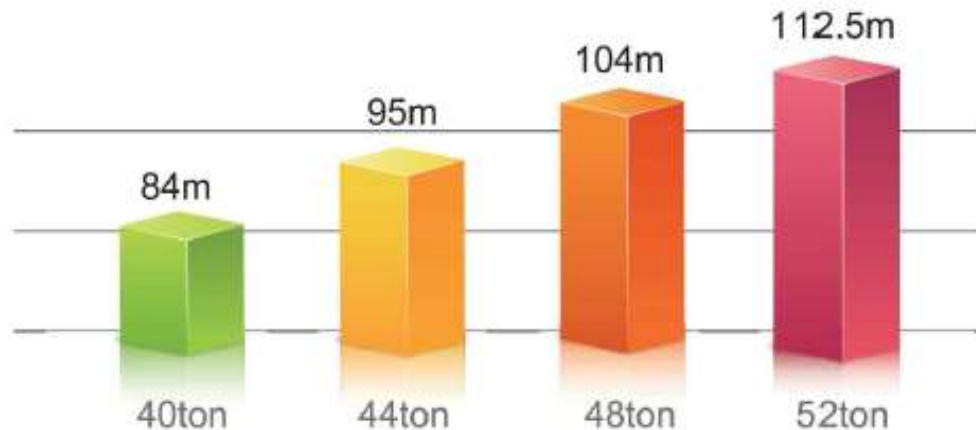
- 과적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자 38%



- 과적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 차체 무게 증가로 **타이어 파손 및 내구 수명 감소**하여 사고 위험 증가
- 차량 **제어를 곤란, 제동 거리**
- **속력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화물차량의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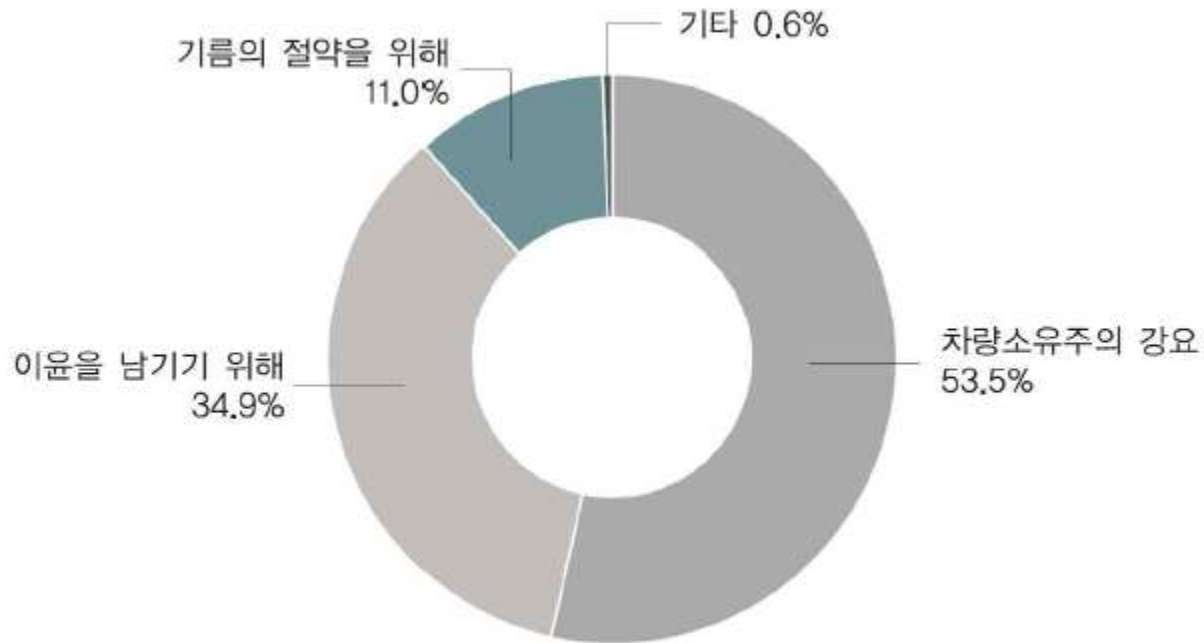
[ 표 3 ] 과적으로 인한 제동거리 변화 (25톤 카고, 100km/h 주행 시)



\* 도로교통공사 2006

- 과적을 하는 주된 이유는 화주의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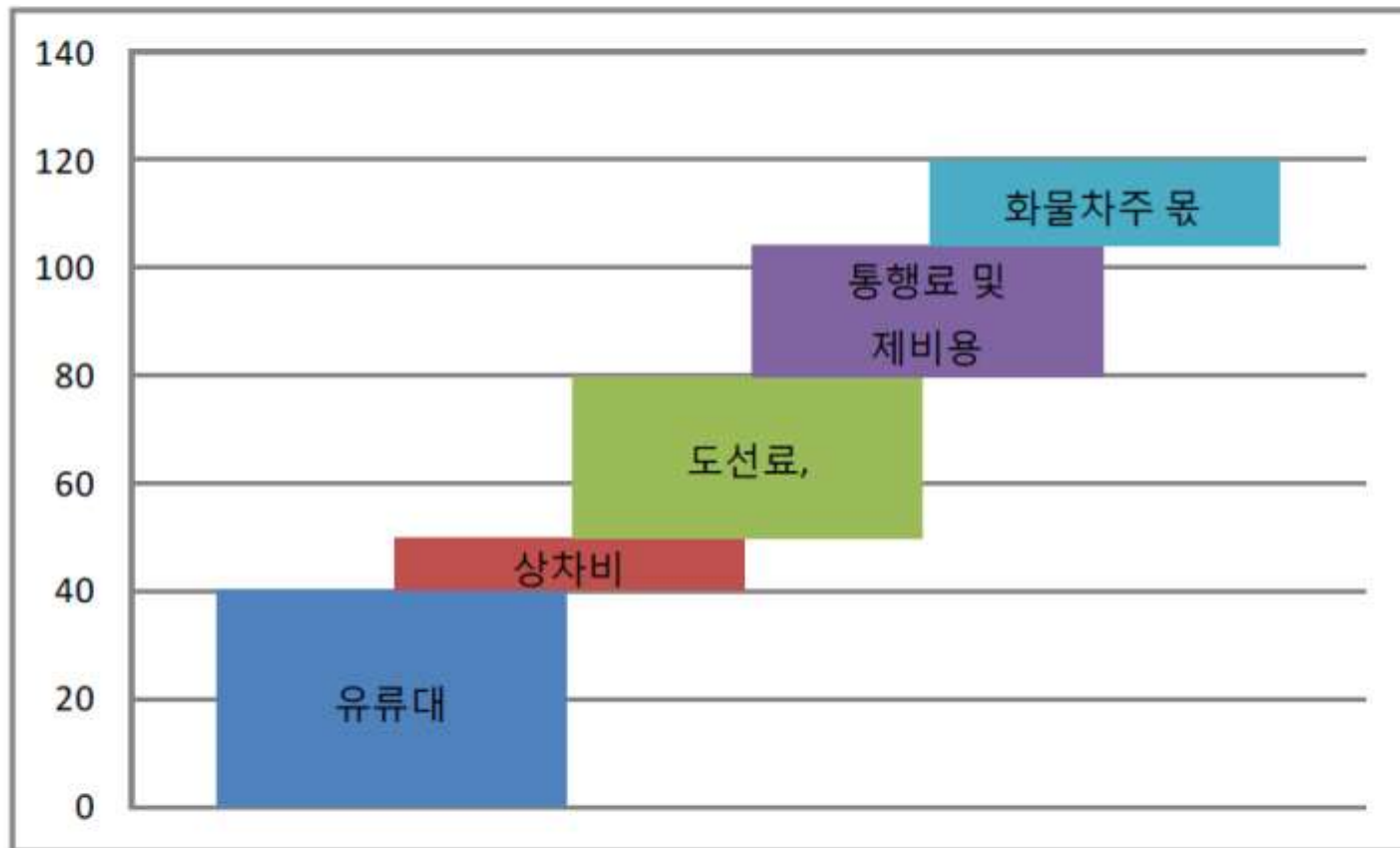
[표 11]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이유



★ 「대형차 사고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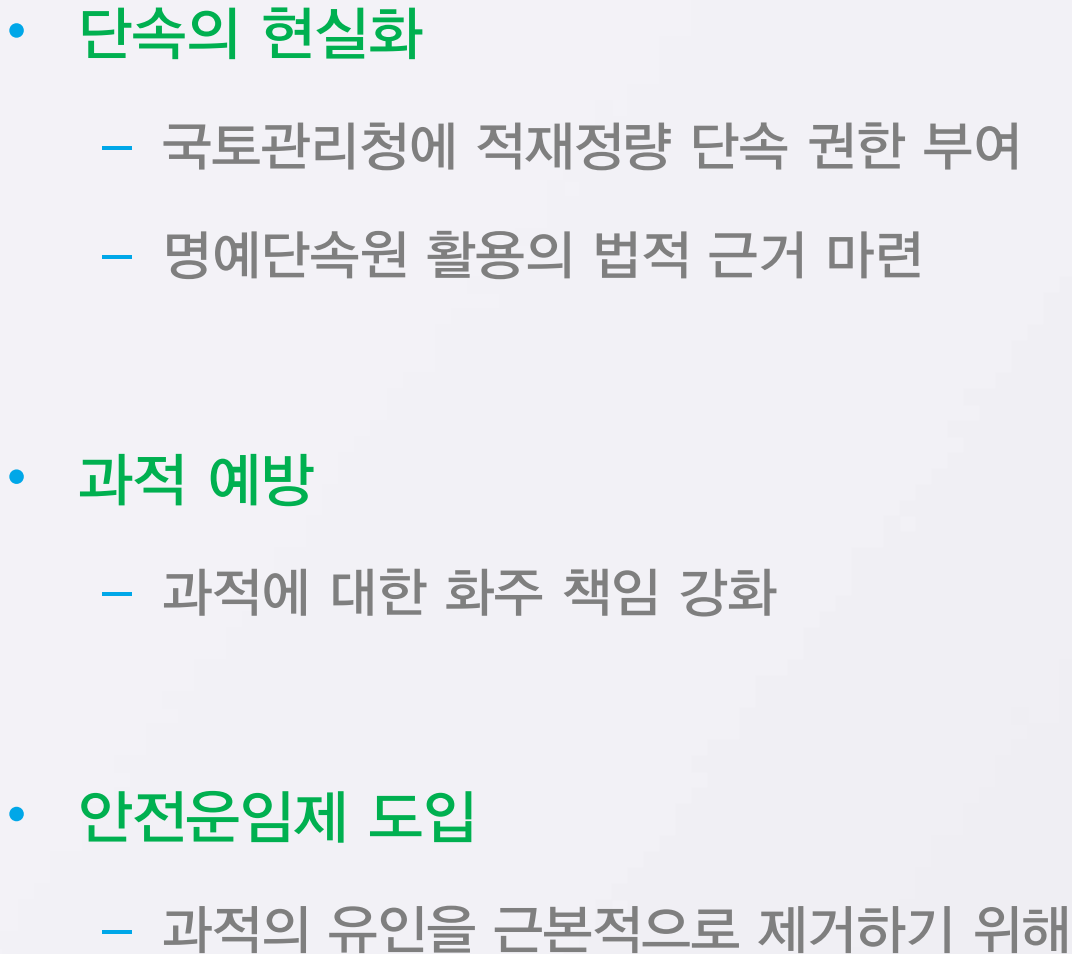
- 저운임을 과적으로 보상

[표 13] 화물 20t 제주-인천 왕복 운송비 구성



\* 화물 20t 기준 제주-인천 왕복수수료 120만원







# 시 설 안 전

-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 저가 낙찰로 부실시공
  - 장시간 노동
  - 공기 단축
  - 산재사망 다발과 각종 시설의 부실공사
  - 공사 진행과정과 완공 이후 시민안전 위협
- 삼풍백화점 붕괴
- 오늘에도 이어져,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등



© 연합뉴스

1995

##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

[탐욕] 백화점 노동자들과 주민들은 균열과 이상 징후를 제보했다. 그러나 경영진은 사고 당일까지 이를 묵살했고 '영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준 회장은 사고 직후 "우리 회사 재산도 망가진 것"이라 말했다.



- 1995년 6월 29일
-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 사고원인

– 부실공사

- 구조
- 날

– 용도

- 사고 처

– 오너

- 압
- 1

– 차남

- 7년

-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일가의 재산 500여 억 원을 모두 압류
- 삼풍그룹은 해체

재발방지대책이 나왔으나  
부실공사를 건설업계의 관행 여전

정부는 안전 문제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  
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향으로 선회

부실방지 대책은 곧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탈바꿈

서는 징역

## 제2롯데월드 주요 사건 일지

(2015.01.15 기준, 여성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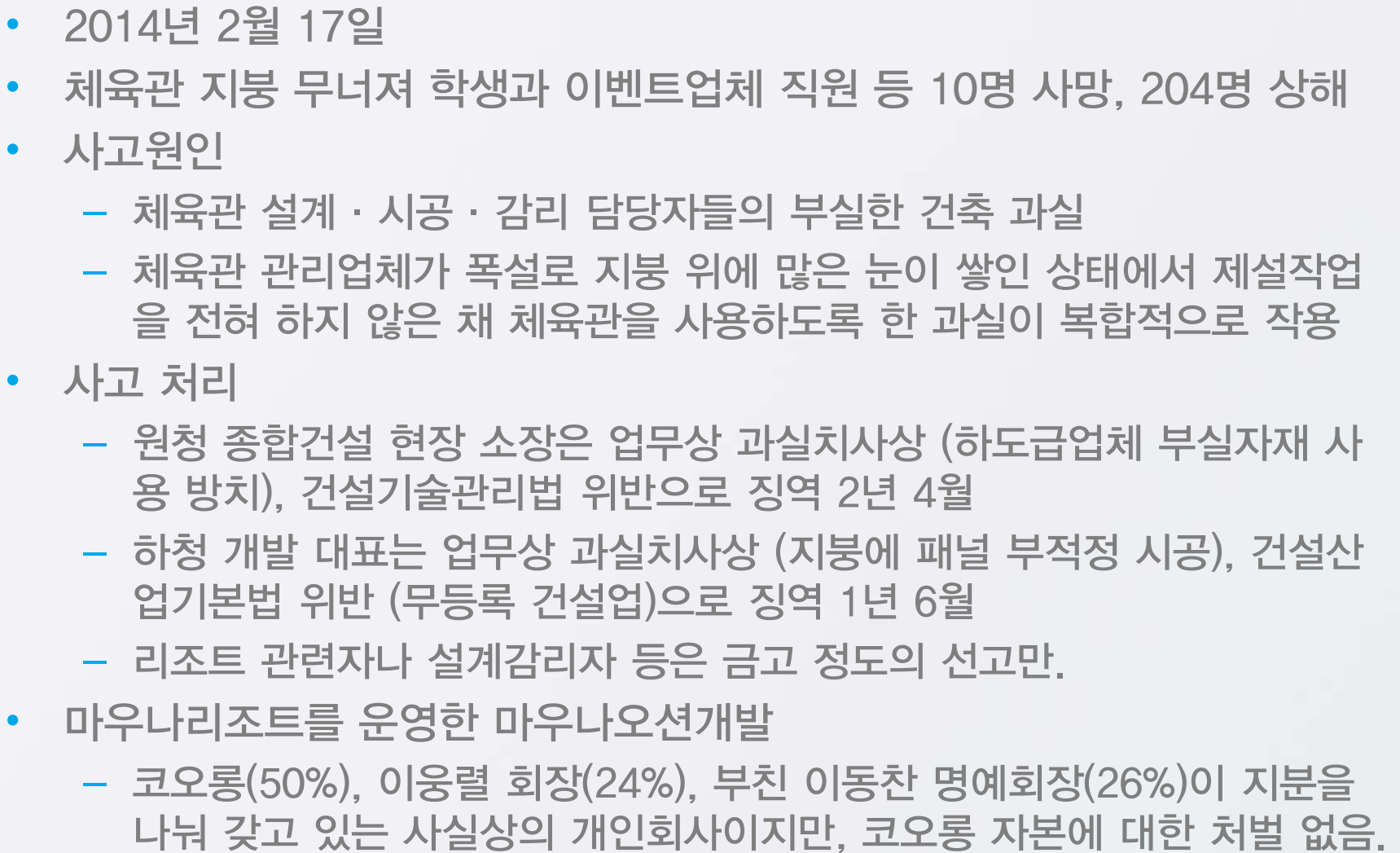
제2롯데월드 출입문, 또 고객 덮쳐



##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상황도



장예진 기자 / 20140218  
@yonhap\_graphics(트위터)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 현대건설

-지난 10년간 사망노동자 1위-

**사망 110명** (2005~2014년 통계)

**사건개요**

4대강 건설부터 원전 공사 등 굵직한 사업들로 인해 수습조를 벌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는 기업

**특징**

부실한 안전시설 조치로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

**선정이유**

'힐스테이트'에 입주하는 것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현대건설은 사망 노동자수에서 1위. 매년 동일한 원인의 사고 반복 2007년,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된 바 있음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 KOLON

코오롱

-부실건축, 부실관리-

**사망 10명**      **부상 128명**

**사건개요**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폭설에도 제설작업 없이 체육관 사용 중, 지붕 무너짐

**특징**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

**선정이유**

리조트를 운영한 마우나오션개발은 ㈜코오롱(50%), 이웅렬 회장(24%) 부친 이동찬 명예회장(26%)이 자본 보유, 사실상 '개인회사' 코오롱이 안전의무를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

순위	기업	사망자(명)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현대건설	110	27	한화건설	27
2	대우건설	102	28	삼성중공업	27
3	GS 건설	101	29	금호산업건설	26
4	우정사업본부	75	29	삼성엔지니어링	28
5	현대중공업	74	31	한신공영	2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32	LG전자	25
7	대림산업	62	33	기아자동차	23
8	롯데건설	61	33	한전KPS	23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35	코오롱글로벌	22
10	사조산업(오통호)	53	36	삼성전자	21
11	SK 건설	53	36	극동건설	21
12	원진레이온	50	38	KCC 건설	21
13	한국철도공사	47	39	계룡건설산업	20
14	현대산업개발	45	40	벽산건설	20
15	현대자동차	45	41	제일E&S	20
16	두산건설	44	42	태영건설	20
17	대우조선해양	39	43	쌍용건설	19
18	동부건설	38	43	한라건설	19
19	유성엔지니어링	37	45	KT	18
20	현대제철	37	45	한국타이어	18
21	포스코	36	45	교촌치킨	18
22	경남기업	35	45	LG 화학	18
23	CJ 대한통운	33	49	고려개발	16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32	49	삼부토건	16
25	서희건설	28	49	한라	16
26	두산중공업	28	49	한양	16

# 반복적 중대사고의 근본원인

- **규제완화**
  - 기업규제완화 특별 조치법
  - 규제합리화를 가장한 자본의 탐욕 보장 수단 규제완화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더욱 강력한 규제완화 진행 중
-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
  - 위험공정과 업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설비 보수 업무 외주화
  - 안전관리자도 비정규직 고용
  -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사용
  -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보건에 무권리 (철도공사, KTX)



- **기업과 정부의 조직적 책임과 처벌**
  - 하청 산재사망에 **원청 무혐의** 남발. 매년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처벌받는 기업도 공무원도 없는 대형 재난사고
- **위험을 알 권리, 거부할 권리, 예방에 참여할 권리**도 없는 현실
  - 안전교육 방치. 화학물질 취급 대 기업 92.5%가 정보 비공개
  - 위험 작업 거부권 없이 묻지마 죽음의 행진
  - **위험을 예방할 권리**도 없는 노동자, 시민.

세월호 참사 이혼 안전사회 건설과  
제

## • 관심을 기울이자

- 일터에서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형이 일하면서 아프고, 다치고, 죽음으로도 몰리고 있다.
- 우리의 가족이, 이웃이 안전하지 않은 것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사회의 단면**

## • 실질적 안전 대책 수립 위해 **노동자, 시민 참여 활로 확보**

- **위험을 알 권리, 위험작업을 거부하고 중지할 권리**
- **예방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노동자, 시민에게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일상적인 권리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나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수고하셨습니다.